

# 노조 전임자 임금인상 미적용... 大法 “부당노동행위”

# “다주택 양도세 합법적으로 절세” ‘10억 건설링 사기’ 일당 8명 구속

### ‘월전 노조 승소’ 원심 확정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부당 사측, 사실상 지급 거부한 것”

노조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 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정이 나왔다.

6일 민주노총 화확성유식품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국내 계임사 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3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협회가 노조 전임자인 노영호 지회장에 2022년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노사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당시 전임자의 임금 인상 분과 인센티브를 조합원 평균에

맞춰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노사관계가 악화되자 사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행정청은 이에 불복하고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청은 지회장에 임금 인상 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체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데, 노조가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산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수석부지회장이 해고된다는 등 3개월 영합으로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채크오프(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징수하고 노조에 인도하는 제도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측이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해서 요구하며 임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지급을 거부한 것과 같다”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행정청은 단체협약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 역시 조합원 명단 제공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2025년 11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행정청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 관련 주장이 상고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노조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당사자인 노영호 협회 지회장은 “노사 간 합의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소녀상 수요시위’ 6일 서울 중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무사 사칭 흠피 개설해 병행 양도세 증과대상등 3명 피해

절세를 미끼로 세무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 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액 A씨(38)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해외출신 직원인 40대 B씨에 대해 인터넷을 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5년 5월~ 지난 4월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미끼로 피해

자 34명으로부터 9억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표 홈페이지에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양도세 증과 대상인 다주택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인출·세탁과 콜센터 등 업무를 조직적으로 나눠 맡아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범죄수익금 5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정으로 동결했다.

인천=윤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김건희 징역 4년 선고’ 재판장 숨진채 발견

### 서울고법 청사서 추락사 추정 “죄송” 유사... 재판 언급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 혐오심을 맡았던 신중호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병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법원 청사 건물 중 2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간략한 분량의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모에는 ‘죄송하다’는 취지가 담겼고, 재판 관련 언급은 없

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법청사 사방과 권역해 범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적인 범사건 전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락에 따른 사인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 판사는 지난 4월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검법외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혐오심 재판부인 형사 15-2부의 재판장으로, 그는 지난 2월6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석달간 심리를 이끌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 통일고 금품수수 관련 특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6220만원 상당 그림과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의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편 신 판사는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법 판사로 일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법변호사회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또한 2022년 10월 서울고법 행정8-2부 재판장으로서 ‘강제복송 사건’에 대한 징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어린이날 흥기로 아내 협박·아들 폭행

### 50대 입건... 격리조치 추진 “자녀 문제로 다룬다” 진술

지난 5일 어린이날 밤 경기 평택에서 50대 가정이 아내를 흥기로 협박하고 6살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형범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평택시 지체중 자택에서 아내 B씨(30대)와 딸다름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흥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6살 아들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출할 딸의 귀가 문제로 아내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숨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진입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방에 있던 A씨를 제압해 흥기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의 일의동행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과 통신 제한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오영희 기자 ows@siminilbo.co.kr

#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보상금

###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2300명 신규 혜택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면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상받지만, 독립유공자가 관복 이천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관복 자녀 1인에게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전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또한 현행 제도에선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이 유족 1인(代)에 그쳐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중 공포돼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어업경영체 부정 등록·보조금 일제점검

### 공익직불금 지급 적정성 확인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함께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어업 경영체의 부정 등록과 보조금 부정 수령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6일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에는 어업인과 어업 법인의 경영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로, 지원 사업 대상 확인 등 어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5년 말 기준 어업경영체는 약 7만7000개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어업 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자의 어업 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 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점검 중 허위 등록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처에 나선다.

아울러 어업인 확인서 허위 발급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업인으로 인정할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